

민주·혁신 합당 추진…호남 지방선거 지형 큰 파장 예고

공천 판 뒤흔들 대형 변수에
선거 5개월 앞 출마예정자 '긴장'
권리당원 경선 등 '룰' 붕괴 우려
구청장·시장·군수·의원 등
지분 요구 현실화 팬 갈등 클 듯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 소식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광주·전남 정치 지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지방선거를 불과 5개월여 앞둔 상황인 만큼 지방선거 출마예정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이번 합당 논의가 단순한 세력 결합을 넘어 호남 지역 지방선거 공천의 '판'을 통째로 뒤흔들 수 있는 대형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동안 바닥 민심을 다져온 입지자들은 혼돈에 휩싸이는 모양새다.

지역 정가에서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언젠가는 합당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던 만큼 양당의 합당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오승용 평타보이스 대표는 "정청래 대표가 공식 제안을 던진 이상 혁신당으로서는 거부할 명분도, 실리적 이유도 없다"며 "합당 논의는 급물살을 탈 것이며, 이는 곧 호남 공천 지형의 지각변동을 의미한다"고 분석했다.

조국혁신당은 아직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지방선거가 5개월 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어서 조만간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게 지역 정가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양당의 합당을 가정했을 때, 문제는 합당에 따른 '청구서'가 어디로 향하느냐다.

정치 전문가들과 지역 정가 관계자들은 혁신당이 합당의 대가로 호남 내 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 공천권을 강력하게 요구할 것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혁신당 입장에서는 합당의 전제 조건으로 조직의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을 제안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분을 최대화할 것이라는 전망 때문이다.

특히 전국 유일의 조국혁신당 소속 자체당인 담당군수 선거는 이미 혁신당 뒷으로 굳어지는 기류이며, 광주시에서도 최소 구청장 1석 이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조심스러운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결국 광주 구청장 1곳과 전남 군수 2~3곳의 전략 공천, 광역의원(시·도의원) 비례대표 배정, 기초 의원당선 유력 선거구 할당 등을 요구할 경우 기존 입지자들의 피해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혁신당은 그동안 전남 동부권인 여수시와 곡성군, 강진군 등에서 민주당 출신 인사나 경쟁력 있는 무소속 후보들과 물밀 접촉을 이어오며 세를 불려왔다는 것이 정치 평론가들의 분석이다.

이 때문에 중앙당 간의 협상 결과에 따라 내 지역 구가 '남의 땅'이 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협력 단체장과 입지자들까지 올라고 있다. 가장 큰 뇌관은 공천 룰의 붕괴다. 현재 민주당의 경선 방식인 국민참여 경선 방식인 '권리당원 50%와 여론조사 50%' 합산 룰은 조직력이 단단한 기존 민주당 후보들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당원 기반이 약한 혁신당이 이 룰을 그대로 수용 할 리 만무하다.

지역 정가 한 관계자는 "혁신당 출신들이 관심을 갖는 지역은 당사자들끼리 피 터지는 혼투가 벌어지는 곳"이라며 "기존의 권리당원 투표 방식을 배제하고, 공천 배심원제를 도입하거나 시민 여론조사 100% 반영, 혹은 양당 합의 추대 형식의 연합 공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2일 전북 전주시 전북도당 당사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등 변칙적인 룰이 적용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는 수년간 권리당원을 모집하며 경선을 준비해온 민주당 입지자들에게는 날벼락과 같은 소식이다.

파장은 기초단체장에 그치지 않는다. 혁신당이 출범 강조해 온 기초·광역의회 진출 육구도 분출될 것으로 보인다.

시의회나 도의회 비례대표 상위 순번을 요구하거나, 특정 지역구 시·구의원 공천권을 할당해달라는 요구가 빗발칠 경우 지역 위원장들의 공천권 행사와 정면으로 충돌하게 된다.

광주의 한 광역의원 출마 예정자는 "합당 명분에는 동의하지만, 갑작스러운 룰 변경이나 낙하산식 전략 공천이 이뤄진다면 탈당 후 무소속 출마 등 집단 반발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토로했다.

결국 민주당과 혁신당의 합당이 성사되면 광주·전남 지방선거판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안갯속으로 빠져들 것으로 보인다.

지역의 한 정치 평론가는 "혁신당이 합당 조건으로 시·도의원 비례대표 상위 순번을 요구하는 것은 상수(常數)에 가깝다"며 "문제는 지역구 기초의원 까지 '전략공천'을 설정해달라고 요구할 경우다"고 지적했다.

오 대표는 "이번 지방선거는 행정통합 이슈에 이어 합당 이슈까지 겹치며 역대 가장 복잡한 고차 방정식이 될 것"이라며 "후보자 개개인의 경쟁력보다는 중앙당의 정치적 셈법에 의해 당락이 결정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정청래 대표, 지방선거 승리위한 '승부수' 던졌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2일 조국혁신당에 전격적으로 합당을 제안하면서 정계 개편의 신호탄을 쏜 것은 6·3 지방선거 승리와 함께 자신의 정치적 미래를 두루 고려한 승부수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재명 정부 들어 첫 전국 단위 선거인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 자신의 정치 운명이 좌우되는 상황에서 예상치 못한 합당 제안을 끼내 들었다는 점에서다.

정 대표의 말대로 혁신당은 민주당과 일부 지지 층이 겹친다. 이런 깊이에 당내에서는 지방선거에서 혁신당과 합당 내지 선거 연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없지 않았다.

최대 경전지 서울을 비롯해 강원·인천·대전·충북 등을 탈환하려면 표분산 차단이 필수라는 이유에서였다. 물론 민주당의 뿌리인 호남에서 혁신당이나 다른 성과를 낼 가능성에 대한 경계도 자리잡

고 있다.

다만 민주당이 이미 절대다수 의석이어서 합당에 따른 의사 운영 측면에서의 효과가 크지 않은 데다 혁신당이 민주당보다 더 '좌측'에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합당의 시급성에 대한 인식은 당내에 크지 않은 상태다.

정 대표의 입장이 급선회한 것은 우선 합당에 따른 물리적 절차 등을 고려한 측면도 있어 보인다. 3~4월 후보 공천 국면에서 합당 논의가 시작되면 그 효과를 제대로 누릴 수 없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물론 이번 지방선거를 지난정부에 대한 심판이자 이재명 정부의 효능감을 지방으로 확산하는 계기로 규정한 만큼 압승을 위해선 범여권이 뭉쳐야 한다는 당위성도 이번 제안의 주요 배경으로 거론된다.

당내 일각에선 정 대표의 합당 제안에 의구심을 갖는 기류도 감지된다.

특히 겹칠 개혁 쟁점을 둘러싼 당내 강경·온건파 간 신경전이 벌어지고, 정 대표의 대의원·권리당원 1인 표제 주진을 계기로 한 세력 분화 흐름까지 감지되는 상황에서 정 대표가 당의 '선명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판을 짜려는 게 아니라는 시각이 당내에 존재한다. 혁신당 지지층은 보다 진보적인 성향을 띤다.

나아가 정 대표의 발표가 이 대통령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코스피 5000포인트'를 돌파한 당일에 나온 점을 불편하게 보는 시각도 있다.

아울러 이날 비공개 최고위에서도 이연주·황명선 최고위원 등이 합당에 대한 우려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청와대 "민주·혁신 통합은 이 대통령의 평소 지론"

청와대는 22일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 논의와 관련해 "양당의 통합은 이재명 대통령의 평소 지론"이라며 "양당 간 논의가 잘 진행되기를 (기대하며)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기자들을 만나 두 당의 합당 논의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특히 홍 수석은 민주당 정청래 대표로부터 공식 발표 이전에 관련 내용에 대해 미리 연락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연락받은 시점에 대해서는 "전날 오후 국회에서 정 대표와 만나고서 청와대로 돌아온 이후"라고 밝혔다.

홍 수석은 "(정확한 시점을 밝힐 경우) 누가 먼저냐, 누가 나중이냐는 논란이 생길 수도 있다"며 더 구체적인 언급은 삼갔다. 이에 앞서 강유정 대변인은 오전 브리핑에서 이번 합당 추진과 관련해

"(청와대와 민주당 사이에서) 사전에 특별히 논의된 것은 없다"고 말한 바 있다.

청와대와 여당이 상의해 합당을 추진하는 모양새가 될 경우 오히려 청와대의 부적절한 당부 개입에 대한 지적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의식, 청와대가 이번 논의에서 거리를 두려 했던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홍 수석 역시 "이번 일은 (당정이) 협의해서 진행한 일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오후 들어 '청와대가 연락을 받지 못했다면 당정 간 소통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더 나아가 이 사안이 당정 균열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되면서 청와대가 '사전 연락' 사실을 공개하며 진화에 나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광주·전남 행정통합으로 당신의 삶이 더 특별해집니다!!

#경제도약 #촘촘한복지 #생활권통합 #함께가는북구

